

헌재 심리시작 180일이내 심판

'역사적 심판'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심판을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 재판관 9명이 박 대통령의 앞날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그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9일 저녁께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를 가동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표결 후 4시간 정도 지나 당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의결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이제껏 그들이 걸어온 주요 경력과 재판관 임명 당시 추천 주체 등의 성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때 인용... 보수성향 6명 박한철 소장 내년 1월말 임기·특검수사 일정 등도 변수

격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공안통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박한철 재판관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2013년 박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재소장이 됐다. 판사 출신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이진성·김창중·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진성·김창중 재판관은 이명박정부 때 대법원장에 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이명박정부

이 지명했다.

공안검사로서 서울고검장을 지낸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추천 주체 등을 감안할 때 6명 안팎을 보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당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 등으로도 성향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적, 정치적 판단 외에 국민 여론, 사회·시대적 흐름 등을 감안하는 헌재 판결에서 이러한 성

향을 심판 결과와 결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임기는 또 하나의 변수다.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3일까지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가 1월 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면 노건영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8명이, 3월14일 이후부터는 7명이 판단해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어 이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면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일반심판의 경우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사건을 결론짓지만 탄핵 결정과 관련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재 재판관 성향

구분	재판관	출신	출신지	비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임명	박한철	검사	인천	내년 1월31일 임기만료
박근혜 대통령 직접임명	서기석	판사	경남 함양	
박근혜 대통령 직접임명	조용호	판사	충남 청양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이진성	판사	부산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김창중	판사	경북 구미	
이우훈 전 대법원장 지명	이정미	판사	울산	내년 3월13일 임기만료
국회 선출(새누리당)	안창호	검사	대전	
국회 선출(민주통합당)	김이수	판사	전북 고창	
국회 선출(여야 합의)	강일원	판사	서울	

특검 수사 결과와 일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국정농단 파문'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검토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다음 주 중반쯤 가능하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특검에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규명하느냐가 탄핵 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헌재의 심리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을 규정한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가벼운 위반이 아니라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뜻한다.

김민진 기자 enter@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대선·정국 안정화 숙제 6월까지 장기화 우려도

향후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권은 탄핵 이후 정국이 돌입한다. 일정을 벗어나 빨라진 대선 시계, 정국 안정화 등 풀어야 할 숙제 역시 산적하다.

◆**뱃꼴 대선 가능해지나**= 내년 대선 일정은 박 대통령이 자진 퇴임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빨리 재판 결과를 내놓을지가 일차적인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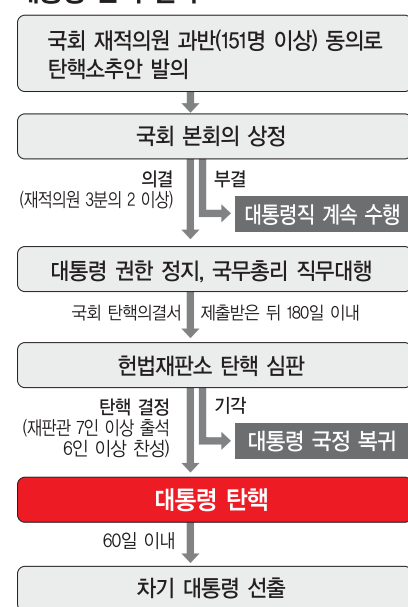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재판이 1월 말까지 날 수 있다는 전망에서부터,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조기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국정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첫 대통령 탄핵이 아닌 두 번째 탄핵으로 절차가 완비되어 있다는 점, 박한철 헌재소장은 1월 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중순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판관 공석 전에 헌재가 서두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헌재가 속도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다만 헌재는 합법적으로 180일간 심리할 수 있어 6월까지 상황 장기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헌재 탄핵은 대통령이 권위할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대선은 빠르면(내년 1월 말 이전 판결 시) 내년 3월에 치러질 수 있다. 반면 헌재 심판이 길어지면 8월 대선도 가능하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이후에 관련된 박 대통령은 이미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조기퇴진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해지는 대선**= 이번 사태로 인해 각 당이 구성했던 내년 대선 일정은 모두 무너진다. 정당 등의 경선 일정 등도 모두 뒤엎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 방식 역시 변형된 형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물의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일단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선거 일정 빠름수록 헌재 여론조사의 선두권 후보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래도 각각의 정치세력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경합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12월 차기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20%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 18

대통령 탄핵 절차



%로 3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8%로 4위, 안희정 충남지사가 5%로 5위 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으로 나타났다.

헌재 소속 정당이 없는 반 총장이 어떤 세력을 대변해야 할지와, 지지를 상위 5위 후보 가운데 3명을 보유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정국 로드맵**= 야 3당이 탄핵에 집중하면서 이후 정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서 정국 혼란 가능성이 크다. 금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은 저희가 오늘 있을 탄핵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에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에 관련해 교체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황 총리 부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이 나눠져 있어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면서 "내가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정국 안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상태다. 일단 새누리당의 경우 지도부가 사퇴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야 간의 등을 도출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갖출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을 앞두고도 빠뜨려졌던 야 3당 공동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관련이다. 나우성 기자 gongang@

9월 최순실 의혹... 촛불... 80일만에 권한 정지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 대기업들의 돈을 모았다는 의혹이 지난 9월에 불거진 이후 80일 만이다.

지난 10월20일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명의의 연설문을 고쳐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영태씨의 말을 근거로 한 보도였고, 박 대통령은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 "도를 지나치게 인공공격성 논란" 등 표현을 쓰면서 몇몇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다가 나흘 후에는 뜬금없이 국회 연설에서 개헌이라는 매머드급 이슈를 내밀었지만 불과 반나절 만에 사그라질 수밖에 없었다.

같은 날 저녁 JTBC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각종 대외비 자료들이 들어 있다는 특종 보도를 했다. 고씨의 말이 물음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해 온 "흔이 비정상" "은 우주가 도와준다" 같은 표현이나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틀리게 말한 것도 고씨가 납득이 가는 듯했다. 허영만만큼이나 국민의 분노는 컸다.

박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3차에 이르는 대국민 담화의 시작이었다. 박 대통령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

검찰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고 지난

10월29일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주말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때 참가자는 2만명이었다. 급기야 해외에 체류 중이던 최씨가 귀국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으며, 취재진과 항의자들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프라다 신발 한 짝을 남겼다.

하야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주도권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11월2일 참여정부 인사였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욱 국민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뽑았다. 야당 측 인사를 내세워 정국을 수습해 보려는 시도였으나 야당은 거부했다.

11월4일, 박 대통령은 2차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와 특검을 수용했고 "내가 이리려고 대통령을 했다"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후였다. "내가 이리려고"는 온갖 패러디를 낳으며 국민적 유행어가 됐다.

그리고 11월12일, 광화문에는 100만개의 촛불이 켜졌다.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1월19일에도 100만명이 촛불집회에 모였다. 촛불의 힘이였을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최씨와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을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11월26일, 촛불집회 참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10월24일	JTBC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 보도
10월25일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차 담화)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다'
10월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10월29일	첫 대규모 주말 촛불집회 2만명(주최측 추산) 참가
10월31일	최순실씨 검찰 출석
11월2일	박 대통령, 김병준 국무총리·이종률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
11월3일	박 대통령, 한광욱 비서실장과 허원재 정부수석 내정
11월4일	박 대통령 2차 담화,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이리려고 대통령 했다"
11월8일	차은택씨 귀국 후 체포
11월12일	촛불 집회 100만명 참가
11월17일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9일	촛불 집회 100만명 참가
11월20일	검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
11월26일	촛불 집회 190만명 참가
11월29일	박 대통령 3차 담화 "진퇴 문제 국회에 맡기겠다"
12월3일	사상 최대 232만명 촛불집회, 즉각 퇴진과 탄핵 요구
12월9일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는 전국적으로 190만명 규모로 커졌다. 박 대통령은 사흘 후 3차 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퇴진의 뜻을 비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탄핵 정국을 교란하는 노림수로 읽혔다. 실제로 비박(비박근혜)계의 입장이 혼선을 보이면서, 야당이 당초 탄핵안 표결을 추진했던 12월2일을 넘기게 됐다.

그리고 다음 날(12월 3일) 열린 촛불집

회에는 전국적으로 232만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민이 몰렸다. 탄핵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요구였다.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열리면서 김기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등 국정농단 세력들과 재벌들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철용 기자 hero@